

소비자 '식품안전정보'에 민감 '과학적 사실' 쉽게 제공돼야

식품위해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도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농약과 식품첨가물을, 미국은 병원성 미생물과 비만, 당뇨 등과 같은 영양학적 불균형을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식품안전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조장용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자정책과 차장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먹을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70년대에만 하더라도 식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많이 먹을 수 있으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당연히 농업정책의 최고 목표 또한 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었고 소득수준이 높아진 현재는 “안전성”을 식품의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게 되었다. 이제는 환경오염과 수입식품의 증가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수요자인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농식품의 생산은 무의미해졌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칼 하인츠 슈타인뮐러는 지난 2007년 출간된 『기술의 미래』라는 책자를 통해서 “식품이 지금 처럼, 오늘날처럼 안전했던 적은 없었다. 또한 소비자가 지금보다 더 불안했던 적도 없었다. 그 이유는 불신이다.” 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식품 구매시 우선 고려요인)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식품선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안전성, 품질, 원산지, 가격 순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수입쇠고기 재개 논란과 멜라민 사태 등을 통해 많은 사회적 혼란과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경험했다.

식품안전정보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로 세계가 떠들썩하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수와 사망자수에 관심과 걱정이 집중되고 있다. 멕시코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돼지인플루엔자로 알려져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양돈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다행히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돼지와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돼지에서 인체로 전염됐다는 증거도 불확실하다고 밝혀 우리나라 정부에서 돼지인플루엔자 대신 신종 인플루엔자로 명명하기로 하는 한편 언론에서도 이를 사용하고 있어 돼지고기 값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식품안전 정보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정보가 곧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작물보호제라 불리는 농약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종종 언론에서 “농약 검출된 농산물 시중유통” 혹은 “농약 범벅 농산물 유통”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소비자의 식품구매에 영향을 준다. 만약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의 기사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배추(예시) 시중유통” 등의 제목으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일 년에 약 3천여 명이 의도적으로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종 언론에 “농약 자살”사건으로 어김없이 보도된다. 이런 보도를 접한 소비자들은 당연히 농약을 극히 위험한 물질로 인식한다. 그래서 잔류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심한 불안을 느낀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생산단계에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서 사용하는 농약은 희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을 비판해 자살용으로 음용하는 농약과는 확연히 다르며 이는 농약 고유의 목적도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약은 작물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이 모두 정해져 있다. 또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에 잔류하더라도 잔류허용 기준치 이내이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잔류농약 검출만으로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표 1. 식품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의 예

생물학적 위해요인	화학적 위해요인	물리학적 위해요인
감염성 세균	자연독	금속, 기계 찌꺼기
독소생산 유기체	식품첨가물	유리
곰팡이	잔류 농약	장신구
기생충	잔류 동물약품	돌
바이러스	환경오염물질	뱃조각
프리온	포장 유래 화학적 오염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 2. 미국과 한국의 식품 위해요인 우선 순위

위 해 요 인	순 위	
	미 국	한 국
병원성 미생물	1	3
영양학적 불균형(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등)	2	6
환경오염 물질(중금속, 다이옥신 등)	3	4
식품중 자연독(비식용 동물 및 부위, 조리과정 중 분해산물 등)	4	6
잔류농약	5	1
식품 첨가물	6	2
항생물질	-	5

따라서 농약관련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제공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해설자료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 위해요인

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인은 <표 1>에서와 같이 크게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도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실시한 식품 위해요

인 인지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농약과 식품첨가물을, 미국은 병원성 미생물과 비만, 당뇨 등과 같은 영양학적 불균형(포괄적 의미에서 위해요인)을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2>.

농약은 화학적 위해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농작물의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약일뿐이며 현대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자재 중의 하

나이다. 물론 농약은 그 자체로서 곤충이나 곰팡이 등 병해충을 살멸하는 물질로 대소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잘못 관리하고 사용하면 사람은 물론 생태계에도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농약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독성시험, 약효·약해시험 등을 거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사용방법을 잘 지켜 사용한다면 사람이나 생태계에도 안전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는 유익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안전 정보제공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식품안전 정보소통이 중요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식품안전 정보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지구 저편 다른 나라에서 멜라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의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달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여 4,8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다.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위해정보관리, 과학적인 위험분석,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 사고발생 시 신속한 긴급대응, 이해관계자와 위험정보교류 확대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위해요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부재와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더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광우병 논란과 멜라민 검출 등의 식품사고에서 보듯이 정보부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를 연간·분기별로 자세한 해설자료 없이 통계적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의 자료 활용

도가 낮고 자료 재해석에 따른 의혹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어 공개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자료도 함께 제공하여 식품안전정보 부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사실 그동안에는 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해식품의 제품명, 생산지, 판매량, 판매경로, 회수조치, 행동요령 등 세부사항까지 즉시 공개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농축산물(Agros.go.kr)과 수산물(Fsis.go.kr)로 나누어 제공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통합(Foodsafety.go.kr) 제공하여 국민들의 식품안전 정보접근성과 정보전달 효과를 제고하고 평시부터 학계, 언론 및 소비자 등과 위험정보교류를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생산자는 가격경쟁력이나 품질경쟁력 못지않게 “안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다. Y